



경기도교육청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 차례 | C·O·N·T·E·N·T·S

발간사

경기교권보호현장

1부 | 교권과 교권보호

I. 교권의 개념	12
II. 교권침해의 개념	18
III. 교권침해 유형	19
IV. 현행 교권 관련 법률	20
V. 교권보호 기구 및 제도	22

2부 | 교권침해 대응 길라잡이

I. 학교안전사고 관련	34
II. 학생지도 관련	45
III. 학부모의 폭행·폭언 관련	52
IV. 학생의 폭행·폭언 관련	58
V. 교원 및 행정기관 관련	66

참고문헌

교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2010년 10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발표한 이후, 많은 분들이 교권침해와 교실붕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경제 발전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진 1990년대 중반부터 계속되어 왔던 사실입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땅히 함께 신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은 사랑과 존경의 관계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마음과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은 서로 동반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앞서 이미 지난해 4월 21일 교권존중 관련 연구를 통해 '경기교권보호헌장'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권보호헌장을 비롯해 교권침해의 개념과 유형, 대응 사례, 관련 법률과 판례 등을 정리해 '교권보호 길라잡이'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매뉴얼을 알찬 길라잡이로 삼아 교권침해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하면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1년 8월

경기도교육감 김 상 곤



경기교권보호헌장

2010년 4월 21일 제정 공포

제1장 총칙

1. 교육은 학습자의 총체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활동으로서, 학습자를 교육하는 교육자의 자질과 전문성에 크게 좌우됨을 인식한다.
2. 교육자는 자신의 지위가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자각하고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3. 학습자와 학부모 및 교육행정당국은 교직을 전문직으로 간주하고, 교육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교육 당사자는 각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교육권의 조화로운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5. 교육행정당국은 교권이 보호받고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제2장 교사의 권리와 책무

제1절 일반 원칙

6. 교육자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하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가진다. 이하에서 규정되지 않은 권리라고 하여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7. 교육행정당국은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절 교육자로서의 권리

8. 교육자는 가르치는 일에서 학문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교육자는 교육내용 선택과 교육방법 결정, 평가와 학생 지도에서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윤리의식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9. 교육자는 연구자로서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10. 교육자는 학교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학교의 공동 사무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제3절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11. 교사가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사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직업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의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12. 교사들이 각종 전문적 단체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교직 전문성을 계발하는 일은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13. 교사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부당한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학교행정가는 교사가 부당한 요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4. 교사에 대한 징계 조치는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모든 교원은 어떤 징계 절차든 각 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 ① 징계 회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
 - ② 징계 사유에 관한 증거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권리
 - ③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지고 스스로 변호하거나, 자기가 선택한 대리자로 하여금 변호하게 할 수 있는 권리
 - ④ 결정 사항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
 - ⑤ 명확히 지정된 기관이나 기구에 소청할 수 있는 권리
15. 교사는 건강하게 교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행정당국은 교사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6. 여 교사에 대한 어떠한 차별 행위도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가정의 책임을 가진 여 교사가 육아와 교육활동을 조화롭게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4절 인간으로서의 권리

17. 교사는 인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특별한 이유없이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
18. 교사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5절 교사의 책무

19. 교사는 자신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신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0. 교사는 교육활동 중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1. 교사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2. 교사는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3. 교사는 학교의 공동 사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교권 교육

24. 교육행정당국은 교사들이 교권을 자각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25. 교육행정당국은 학습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권의 조화로운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26. 교육행정당국은 학교행정가를 대상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교권 보호 제도

27. 교육행정당국은 교권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교권 보호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8. 교육행정당국은 학교에서 교권 교육 및 교권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9. 교육행정당국은 교권 상담 및 교권이 침해된 교사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원만하게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칭) 교사지원센터 등을 지정·운영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0. 교육행정당국은 교권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 교육권보호위원회 등의 적절한 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1. 교육행정당국은 학부모 등의 무고한 행위로 피해를 입는 교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권 전담 변호인단 구성 및 운영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부 | 교권과 교권보호

I. 교권의 개념

II. 교권침해의 개념

III. 교권침해 유형

IV. 현행 교권 관련 법률

V. 교권보호 기구 및 제도

I. 교권의 개념

교권은 교사의 권리(權利) 또는 교사의 권위(權威)를 의미하거나, 둘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김종철, 1989) 대한교육연합회(1982)에서는 교권을 협의로는 교사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교육권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여기에 교사의 권위와 생활 보장권 및 자율적인 단체 활동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1. 교육자로서의 교사의 권리(교육권)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교사는 교육할 권리를 갖는다. 이는 통상 교사의 교육권(또는 수업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교육과정 편성권, 교과서 작성권, 교재 채택 및 선정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 지도 및 징계권 등을 포함한다(강인수, 1989: 34~38; 고전·박경목, 2007: 209).

교사는 다른 교육 주체들과의 관계에서 교육권을 행사하게 되는 바, 교사의 교육권은 일정하게 제한된다. 첫째, 학생의 학습권에 의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교사의 교육할 권리는 학생의 배울 권리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권리인 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권리이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가 될 수는 없다. 둘째, 부모의 교육권에 의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 부모의 교육권은 자연법적으로 인정되며,

학교교육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교사의 과업 중 교육권적 사항에 대한 부모의 관여는 부당한 관여로 인정될 수도 있다.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ILO/UNESCO) 제67조에서는 “학생을 위하여 교사와 학부모 간에 긴밀한 협조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원은 본연의 교직 임무에 대하여 학부모들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고 교사와 학부모 관계를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본연의 교직 임무’는 앞에서 살펴 본 교사의 교육권의 내용을 의미한다. 셋째, 국가의 교육행정에 의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이시우 외, 2007: 39) 국가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을 집행하고 교육행정 활동을 전개하는 바, 교사의 교육권은 국가의 교육행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부당하게 교사의 교육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제63조에서는 “모든 감독 제도(inspection or supervision)는 교원의 전문적 직무 수행을 장려하고 원조함에 그쳐야 하며, 교원의 자유와 창의 및 책임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국가 개입의 한계를 선언하고 있다.



2. 전문직 종사자로서 교사의 권리

교사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법률을 통하여 일정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송화섭, 1993: 310~314)

가. 신분 보장

「교육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바,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은 물론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일반 공무원보다 강력한 신분 상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이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권고 사직 금지, 불체포 특권 등도 법률로 보장받고 있다.

나. 쟁송 제기권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징계 처분, 직위 해제, 강임, 휴직, 면직 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 즉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 그 외 행 정상의 쟁송 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 처분이나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충 처리 제도(grievance system)를 두어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근무 조건 또는 인사 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 혹은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 불체포 특권

「교육공무원법」 제48조와 「사립학교법」 제60조 및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내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특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원으로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당한 압력을 배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라. 교직 단체 활동권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은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도 및 전국 수준의 교원 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되어 단결권을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고 있다.

3.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교사는 전문직 종사자이기에 앞서 인간이다. 따라서 교사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으며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교사는 교육자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기본권 중 일부가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교사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지지만, 교육 활동 중에 의사표현의 자유를 일정하게 제한받는다. 교사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과 무관하게 음란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 또, 교사는 정치적 기본권을 일부 제한받는다. 정당 가입이 금지되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할 수도 없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가운데 교사와 관련이 깊은 것들을 열거하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교사 권리의 침해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바, 교사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행복추구권을 향유할 수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일부 학부모와 학외 인사들이 교사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교사의 존엄을 해치고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나. 신체의 자유

「헌법」 제12조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는 바, 교사 역시 자신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그동안 교사는 체벌 등을 통해서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체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거나 심지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교사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 양심의 자유

「헌법」 제19조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는 바, 교사 역시 자신의 양심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양심을 실현할 자유가 있다. 근래 학교 현장에서는 일부 학부모가 교사를 대상으로 각서를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사의 내면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교사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라. 의사표현의 자유

「헌법」 제21조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의사표현의 자유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현재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면이 없지 않다.

마. 재판 청구권

「헌법」 제27조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교사 역시 억울한 일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사실상 교사가 학부모나 학생을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권은 일종의 중층 구조를 가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교육자로서 교육할 권리가 교권의 내포를 형성하며, 교육 조직에 종사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가 교권의 다른 측면을 형성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교사이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권리도 교권의 개념에 포괄된다.

II. 교권침해의 개념

일반적으로 교권침해라고 부르는 사례는 교사의 신분 문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교사에 대한 협박과 금품 요구, 학부모의 부당 행위 등이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교권침해 사례로 거론되는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학교 행정가,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의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

III. 교권침해 유형

1. 교원으로서의 교육할 권리 침해 유형

- 인터넷에서의 교사 비방 또는 언론매체를 통한 압박
- 교사 배제를 주장하는 서명운동 등 명예훼손
- 학내에서 폭언이나 난동 등 수업과 업무 방해
- 학내외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폭력
-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폭언과 협박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거부, 직접 보상, 추가보상 요구
-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
-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
- 교사에게 일방적인 책임 전가
- 학생평가와 관련한 권한 침해

2.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침해 유형

- 사립학교에서의 법인 내 학교 간 강제전보
- 교내인사위원회의 운영 미흡
- 방학 중 근무지의 연수에 대한 승인권의 남용
- 기간제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3.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침해 유형

-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 또는 폭행
- 휴가 허가권의 남용 등 복무와 관련한 분쟁
- 모성보호와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권리 침해

IV. 현행 교권 관련 법률

• 헌법

(제31조제4항)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

• 교육기본법

(제14조제1항)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제12조제3항)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

(제2조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

(제4조) 교원의 불체포 특권

(제5조)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여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운영한다.

(제6조) 교원의 신분 보장

(제7조 이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관련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7장-고충심사위원회) 신분보장, 징계, 소청의 제목으로 휴직, 불체포 특권, 고충 처리

• 국가공무원법

(제8장-신분 보장) 국가 공무원인 교원에 대하여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직권 면직, 휴직 등을 규정

(제9장-권익의 보장) 고충 처리를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2조) 교육 정책 수립 시 교원 의견 반영

(제5조) 행사 참여 요구의 제한

(제6조)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제7조)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관련 규정

V. 교권보호 기구 및 제도

1.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는 각급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6786호, 2000년 4월 18일 제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규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 규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각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령 제6조제4항) 경기도 소재 공립학교에 설치되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그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동 조례 제6조), 조정 신청이 있으면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동 조례 제7조제2항)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는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동 조례 제9조제1항),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동 조례 제9조제2항)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 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 대행 등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

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동 조례 제9조제3항).

위원회는 분쟁 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제9조제4항) 아울러 분쟁 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 인권 침해의 정도가 교육적 훈계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 의결 등 인사 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교원소청심사 제도

교원소청심사 제도는 1991년 제정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된 제도로 교원이 징계 처분 및 그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 포함)을 받은 경우, 이 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이 위원회의 결정은 징계권자를 기속하도록 한 제도이다. 소청 심사에 불복하는 경우는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학교안전공제회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상당한 경우는 학교안전사고 처리를 둘러싼 것이다. 교사가 사고 처리를 미흡하게 하여 학부모가 불만을 제기하거나,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한 학부모가 교사와 학교에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이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학교 안전사고로 정의하고(제2조제6호), 교육감이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제1항)

4. 고충심사위원회

교사는 학교행정가나 동료 교원에 의하여 교권을 침해당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대부분 학교 내의 문제가 소재가 되며, 교사가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사전에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 처리 제도를 두고 있다.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1항)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과 학기술부에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동조 제3항)

5. 교사에 대한 민원 조사 시 교권존중

학부모나 학교 외부 인사가 교사의 교육활동이나 그 밖의 일에 대하여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부당한 민원이나 진정으로 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사에 대한 민원 사무 처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교사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이 제기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이나 진정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해 교원의 수업 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6. 학생 지도와 징계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시에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지도권과 징계권을 행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서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서는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 처분을 징계의 종류를 설정하고 있다.

퇴학 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로서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제31조제4항)



7. 학교장통고제도

□ 법적 근거 : 「소년법」 제4조제3항

소년법

[법률 제8722호, 2007. 12. 21, 일부개정, 시행 2008. 6. 22]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제도 설명** : 학교장 등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소년부)에 접수시키는 절차
- **운영 목적** : 비행에 대한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와 환경조성을 우선하는 등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둠
- **대상자**
- 범죄소년(죄를 범한 소년) : 14세 이상~19세 미만
 - 촉법소년(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 10세 이상~14세 미만
 - 우범소년(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 10세 이상~19세 미만
- **처리절차**
- 사건접수(학교장→법원 소년부) → 조사 → 심리 개시 또는 불개시 결정 → 심리 → 보호 처분 또는 불처분(심리 개시 또는 불개시 결정 포함)
- **제도 장점**
- 법원의 처리 내용이나 결정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자료로 통보되지 않음으로써 청소년(학생)의 장래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교육적 측면이 강조된 제도
- **참고 사항**
- 본 제도 운영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각 지역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로 문의 ☎ 수원지방법원 소년법정 법정동 201호, ☎ 031-210-1114, 210-1482~4, 210-1111(야)

8.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 지원제도

가. 교권보호지원단 운영

□ 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단

- 위원구성 : 전문직, 변호사, 학부모, 법무담당, 퇴직교원
- 임무 : 교권침해 사안 지원 및 해결 방안 모색
- 부서별 담당자 및 업무 내용

업 무 담 당	업 무 담 당 내 용
교원역량혁신과 (초·중등인사담당)	학부모로부터의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지원과 (생활인권담당)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 및 폭력 또는 학생 사안 관련 교권침해
교원역량혁신과 (교원단체담당)	교원단체에서 교권침해 사안 제기한 내용
복지법무 담당관 (법무담당 및 교직원복지 담당)	법률지원, 교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선택항목에 교직원 단체보험 추가가입 지원 등)

○ 교권침해 관련 소송 지원

담 당	내 용
고문 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법률 사안 및 교권침해 상담 ○ 교권침해 관련 소송 수행에 대한 자문
법무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권침해 사안 관련 소송 절차 등 안내 ○ 교권침해로 인한 법률 분쟁 시 고문변호사와 교원간의 상담 연결 지원
경기도 학교 안전공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권침해 법률 분쟁 시 소송비 지원 등
지역교육청 및 교육청 담당 장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권침해 관련 상담 ○ 고문변호사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교권분쟁 관련 상담 요청 시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

□ 지역교육청별 교권보호지원단

- 위원구성 : 전문직, 변호사, 학부모, 지역인사, 퇴직교원, 현직교사, 상담교사, 경찰관 등
- 임무 : 교권침해 사안 지원, 지역별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 지역 유관 기관 협력 요청, 지역 언론 중재, 교직원 연수, 피해자 보호 등

나. 법률자문 서비스

□ 고문변호사 운영

지역	성명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수원	한진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5-23 2층 변호사 한진희 법률사무소	(031) T : 214-6464 F : 214-6466
	정병혁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3-23 승전빌딩 305호 변호사 정병혁 법률사무소	(031) T : 213-5800 F : 213-9252
	김철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4-1 전원빌딩 301호 법무법인 다산	(031) T : 213-2100 F : 212-1006
	박공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02-17 명진빌딩 4층 변호사 박공우 법률사무소	(031) T : 217-2266 F : 214-5511
	소윤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5-21 안전빌딩 3층 변호사 소윤수 법률사무소	(031) T : 217-8181 F : 217-8184
	김원일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4-22 법조빌딩 2층 법무법인 효원	(031) T : 211-1234 F : 212-2928
	주은희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102-22 진빌딩 602호 법무법인 경기	(031) T : 212-8858 F : 213-1280
안양성남(서울)	김기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명촌역 2번 출구) 법무법인 안양	(031) T : 387-5400 F : 387-5409
	이기욱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43-12 장생빌딩 5층 법무법인 창조	(02) T : 588-4350~2 F : 588-4415
	박형명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23 여삼빌딩 12층 법무법인 양현	(02) T : 3453-8200 F : 3453-8230
	탁경국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1-18 은성빌딩 5층 변호사 탁경국 법률사무소	(02) T : 508-7954 F : 508-2116
의정부	정성호	의정부시 가능1동 363-1 법전빌딩 202호 변호사 정성호 법률사무소	(031) T : 873-3535 F : 872-1498
	우경선	의정부시 가능동 36-16 진성빌딩 2층 법무법인 다원	(031) T : 871-0002 F : 871-4175
고양	김호식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601호 법무법인 통일	(031) T : 908-6700 F : 904-6695

□ 온라인 법률자문 서비스(법률자문 도우미) 운영

- 근무지 관할 지역의 고문 변호사에게 우선 요청
- 바로가기(인터넷주소)
: <http://210.104.161.203/kgEdu/jsp/main.jsp>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행정마당] → [법무행정 서비스]
→ [법무도우미] → [법률자문 도우미]

다. 교권침해 신고 사이트 “선생님 지키미” 배너 운영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팝업존
“선생님 지키미” 활용, 사안 신고

라. 지원 제도 활용 안내

□ 교권침해 상담

구 분	담당부서	연 락 처
학부모의 교권 침해 상담	교육국 교원역량혁신과	031-249-0155, 0231
학생의 교권 침해 상담	교육국 학생학부모지원과	031-249-0210~4
각종 법률 및 복지 상담	기획관리실 복지법무담당관	031-249-0694~5
안전사고보상 및 소송비 지원상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031-249-0022~8

□ 교원단체의 자문 및 지원

- 경기도교육청 담당부서 : 교육국 교원역량혁신과(☎ 031-249-0242)
- 각 교원단체 : 다양한 자문 및 지원 활동(상담, 법무 포함)



2부 | 교권침해 대응 길라잡이

I. 학교안전사고 관련

II. 학생지도 관련

III. 학부모의 폭행·폭언 관련

IV. 학생의 폭행·폭언 관련

V. 교원 및 행정기관 관련

I. 학교안전사고 관련

① 학교안전사고 의미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 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 교육활동이란?

1.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2.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② 학교안전사고 관련 교원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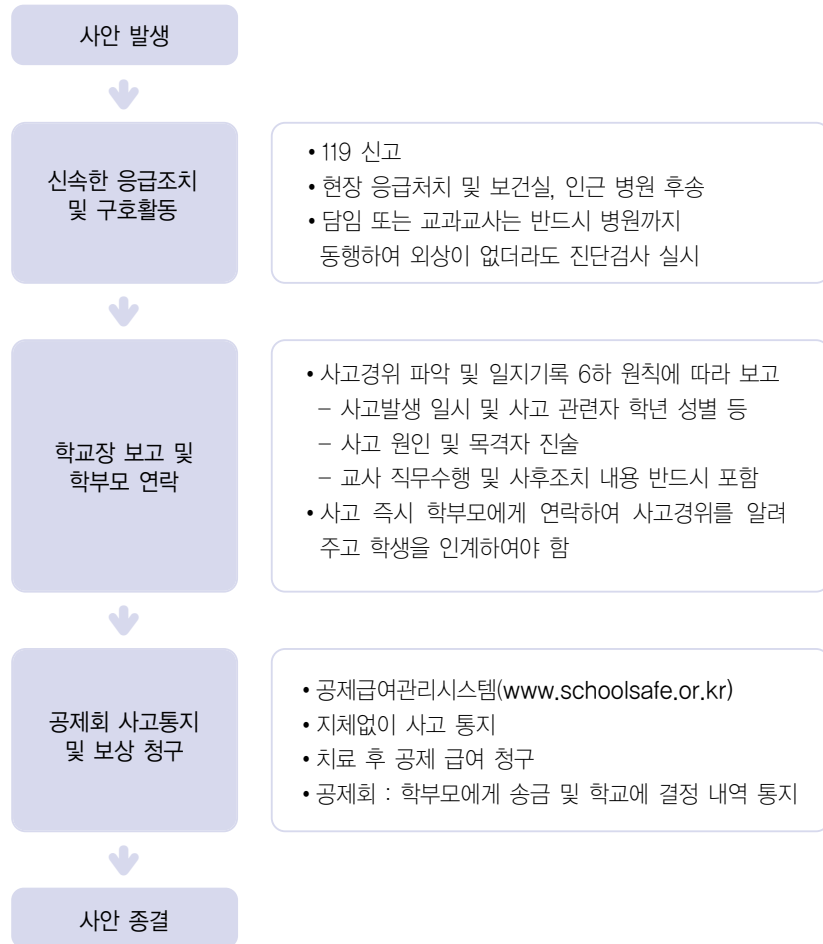
□ 사전교육활동 철저!

- 안전사고 예방교육 주기적으로 실시
- 교육활동 중 예상되는 각종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문서로 보존하기

학생 지도 이전에 이것 꼭 기억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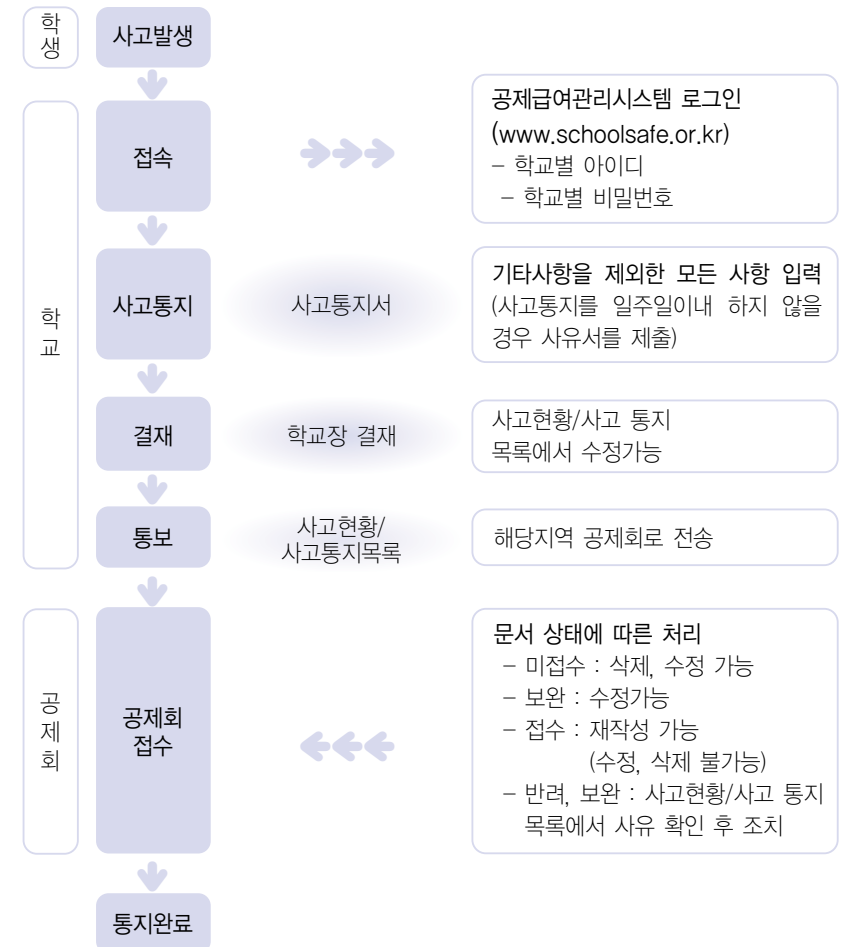
- ⇒ 학생에게 사적인 심부름 금지
- ⇒ 학교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관리 실시
- ⇒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책 마련 및 지속적 상담 실시
- ⇒ 학생 간 집단 따돌림 또는 폭력발생 시 지속적인 지도 (상담일지 작성 등)
- ⇒ 교육활동 중 가급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있기
- ⇒ 실험·실습학습에선 사전 안전지도 및 사후 실험·실습 재료 처리 철저
- ⇒ 현장학습·수학여행 등의 교육계획 수립 시 준수사항 철저 이행

③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고 통지 방법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하고 보상하기 위한 절차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 급여 청구 방법



④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교권침해 대응 요령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 내외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 중의 안전사고에 대해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상액이 적을 경우 교사나 학교장, 교육감을 상대로 과도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소송까지 제기하는 학부모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공제 급여액 이외에 학부모의 추가 보상요구로 인해 교사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비 및 공탁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권침해

■ 학교장 또는 담당교사에게 도의적인 금전보상 요구 시

- 학부모에게 합의금 등 개인적인 보상금을 제공하지 않고 경기도학교 안전공제회에 요청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학교장 또는 교육청에 담임교체, 전보, 징계 등 부당한 인사 요구

- 교원의 신분상의 권리와 적절한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계속 부당한 요구 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부당한 처분, 전보, 담임박탈 등이나 징계 처분 시 소청심사 청구

■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사실 언론 유포

- 증거 확보 후 학교장이 해당언론사에 정정보도 요구
- 교육청 교권보호지원단 및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적 대응

■ 민·형사소송제기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변호사 선임 후 적극 대응

5 법원 판례

미술시간 후 친구가 던진 찰흙에 눈을 맞아 실명한 경우 교사의 과실을 묻는 사건

중학교 3학년 이모군은 미술시간이 끝난 직후 쉬는 시간에 친구가 던진 찰흙에 왼쪽 눈이 맞아 수정체가 손상되었다.

상처가 악화되어 백내장으로 진행, 수술로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뒤에도 눈의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부모들은 해당교육청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런 경우 교사의 과실로 인정되는가?

➡ 교사의 지도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 Why?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수업이 모두 끝나고 종례만 마치면 귀가할 수 있어 학생들이 해방된 기분으로 정신상태가 해이해지기 쉬운 상황이었다며 장난 등의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은 시간이었는데 학생들이 찰흙의 처리에 관한 보다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주의를 주어 사고를 방지했어야 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 만들기 및 활동 후 재료들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하기

6 학교안전사고 관련 Q & A

Q. 학부모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보상대상이 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를 ‘교육활동참여자’라고 해서 보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학부모가 학교버스에 학생보호를 위해서 탑승하거나, 학교 앞 교통지도를 하거나, 급식활동을 보조하거나,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학교 행사 도우미로 참여하는 등 매우 다양한 경우가 가능하다.

※ 단, 내부결재나 학교장의 승인자료 꼭 준비

Q. 초등학교 학생이 수업개시 1시간 전인 08:00경에 등교하여 시소 놀이시설에서 혼자 놀다가 실족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공제급여 지급 대상이 되나요?

A. 공제급여 대상이 된다.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

조기 등교한 학생이 학교 내에서 놀다가 다친 경우 학교장이 교육 활동을 위하여 교문과 교실을 개방하고 등교하는 학생을 수용하였다면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므로 공제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

Q.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놀다가 학생과 학생이 부딪혀 앞니가 부러져 안전공제회의 치료비를 받았으나 가해자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부모가 평생 동안 치아를 치료할 비용까지 교사에게 요구한다면?

A. 교사한테 치료비를 요구할 수 없다.

상대방의 경제적 요구에 대해서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연락을 취하여 상황설명을 자세하게 한 후 대응방침을 마련해야 하며 만약에 소송으로 진행시에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소송비용 및 법률 지원을 담당하므로 요청한다.

Q. 학생사고가 교사의 책임이라고 판단될 때,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인가요?

A.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의 지급 급여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학생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의 소홀, 사고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부주의, 소홀히 한 사후조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사전교육 및 주의지도, 사후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치료비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Q. 수업 중 관리자의 호출로 교장실에 간 뒤 학급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나요?

A. 1차적인 책임은 담임교사에게 있으나 결과적으로 학교경영을 책임지는 학교장에게 책임이 있다.

교사는 수업시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교장선생님께서 수업 중 호출을 한다면 정중하게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가겠다고 말씀드려야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학교경영을 책임지는 학교장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관리자도 학습권보호를 위해 수업활동시간에는 교사를 부르는 것은 금해야 할 것이다.

Q.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은 어디까지 인가요?
그 기준을 알고 싶어요.

☞ 2011년 9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보상금이 확대 지급
될 예정이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제급여 지급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2011년 9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보상금을 확대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구 분	현 행	확 대
과실상계	요양급여(치료비 보상) (10~50% 과실상계) 장해, 유족급여 등 (10~50% 과실상계)	과실상계 하지 않음 사안에 따라 30% 내 과실상계
치아보철	보철 40만원 한도 보상 레진 12만원 한도 보상	의사 소견에 따라 실비 인정
소송비용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비용 보전	학교장, 교직원 대상 소송비 및 공탁금 전액 지원



II. 학생지도 관련

① 학생지도와 관련한 교권침해

학생지도 시 학업을 정진하게 한다거나 비행을 교정하려는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대안적인 지도 및 훈육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호소한다. 체벌의 경우 정당성
이나 합목적성 여부를 떠나 교사의 일정한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된
만큼 학부모의 민원제기와 고소, 무리한 피해 보상 요구 및 신분위협
정도가 매우 심한 추세이다.

② 학생지도 관련 교원 유의사항

학교 현장에서 학생지도 시 체벌은 금지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학생에 대한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말로 훈계와 경고를 하였으
나 반복적으로 잘못이 나타날 경우, 수업진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
거나 움직일 경우, 친구를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경우일 때 학생과 대립
하여 교권침해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학생지도 이전에 이걸 꼭 기억합시다

교육적 학생 지도 요건

- ❖ 교육의 목적에 부합할 경우
- ❖ 다른 지도방법으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 ❖ 학생의 비행정도, 연령, 성별, 건강을 고려한 징계일 경우

- ❖ 체벌은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교육적으로 정당한 지도였다 할지라도 학교생활인권규정과 다르게 학생 지도를 했을 때는 추후 교사에게 불리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고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 ❖ 학생지도를 할 때에는 학생 행동의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고 신체, 정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지도를 한다.
- ❖ 학생지도의 동기 및 목적이 교육적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성적향상이나 학칙위반 등의 사유로 인한 체벌 금지)
- ❖ 학생지도방법이 사회 상규에 부합해야 한다.
- ❖ 학생지도로서 훈육 사유를 분명히 학생에게 인식시키고, 학생의 동의를 얻은 '훈육동의서'를 학부모에게 고지한다.
- ❖ 교사의 신체를 이용한 학생 지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 ❖ 학생지도 시 학생에 대한 폭언이나 모욕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 ❖ 학생지도 시 생활·인권 교육 매뉴얼(담임교사를 위한 생활인권교육 매뉴얼, 경기도교육청, 2010)을 참고 하여 사안에 맞게 지도한다.

잘못된 지도 시 형사 처벌 대상

- 교사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
- 부상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
-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는 행위
- 공개적으로 체벌, 욕설 하는 행위

③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

사안 발생

- 해당교사 사고경위서 및 일지 작성
 - 6하 원칙에 의거
 - 목격자 진술 확인
 - 응급처치 등의 적절한 조치

빠른시간내에 해당 학생과 진술한 대화 필요



초기 대응

- 학교장에게 보고
- 상담 교사 및 동료 교사의 협조 요청

학부모에게 학생 지도의 동기, 경위를 충분히 설명



사안 확대 시

- 피해학생 학부모의 보상 요구 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통해 해결
- 교육청 고문 변호사 및 교권보호지원단 도움 요청

지역 교육청 연계



사안 해결

- 미해결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단 협조 요청

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단, 고문 변호사 연계



사후처리

- 재발 방지 대책 강구
- 부당한 징계 처분시 교원소청심사 청구
- 지역 교육청 및 도교육청 연계

④ 학생지도로 인한 교권침해 대응 요령

치료비 및 금전보상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전 보상 요구에 응하지 말고 관계기관과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됨을 통보 • 학생의 피해정도(진단서)를 확보
학교에 난입하여 폭언, 폭행, 협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 신고, 증빙자료(목격자 진술서) 확보 • 학교장은 관할 교육청에 사안 보고
부당한 인사 조치 (전보, 담임교체, 징계) 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처분(전보, 담임박탈 등) 및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 청구
상급교육행정 기관에 허위 민원 제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과일지에 자세히 기록 • 학교장 허위사실 정정 보고

⑤ 법원 판결

대법원 2004. 06. 10. 선고 2001도 5380 판결

1999년 여중생을 체벌하고 다른 여중생에게 욕설을 해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체육교사에 대한 판결(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대법원은 교사의 체벌이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례로, 체벌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 않은 채 지도 교사의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지도할 수 있음에도 낮선 사람들이 있는데서 공개적으로 체벌·모욕을 가하는 행위,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교사가 신체를 이용해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 학생의 성별·연령·개인사정에 따라 건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준 행위 등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체벌행위를 제시했다.

학생의 뺨을 때려 고막을 파열시킨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방법원 제 ○형사부(재판장 ○○○수석부장판사)는 6일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제자의 뺨을 때린 혐의(중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도 ○○초등학교 교사 김 모(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과 김 씨가 피해자를 문병 했을 때의 정황에 대한 다른 증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김 씨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 자체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⑥ 학생지도 시 교권침해 관련 Q & A

Q. 학생에게 육체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수치심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담임의 전출을 요구할 때의 대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징계방법으로 체벌은 허용하지 않는다. 학생 체벌 후에 교사가 취해야 할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체벌학생 및 학부모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준다. 이때 동료 교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목격자 진술 및 경과일지를 작성한다. 벌을 받게 된 상황과 체벌을 가한 방법, 정도 등을 상세하게 포함되도록 한다. 그래도 부당한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 6조) 교육청 고문 변호사 및 교권보호지원단에 상담을 요청한다.

Q. 금지된 대체벌을 주는 과정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을 하여 교권을 침해 당했다면 대응 방법은?

A. 교사가 교육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여 학생인권조례에 금지된 간접 체벌을 실시하였다면 추후 교사에게 불리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체벌 학생과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 학생에게 체벌의 동기와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한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준 후 교사에 대한 폭언에 대해 지도를 실시한다.

Q. 교사가 지도과정에서 가벼운 체벌을 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협박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가벼운 체벌이라 할지라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즘 판결 추세이다. 하지만 교사가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정도를 넘는 요구나 부당한 협박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 학생 체벌 관련 교원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사건 경과일지 및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후 학부모에게 체벌의 동기와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후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확보한다. 사안이 확대될 경우 학교교육 분쟁위원회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 6조) 교육청 고문 변호사 및 교권보호지원단에 상담을 요청한다.

Q. 교사의 체벌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A. 지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교사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의 어떠한 보호도 받기 어렵다. 교사의 과실에 따른 세 가지의 책임이 따르는데 이는 아래 표와 같다.

		책임질 부분	책임을 묻는 주체	기 타
교 사 의 책 임	민사 책임	학생의 치료비와 학생가족에 대한 위자료	학부모가 교사에게 소송 교육감이 교사에게 구상 청구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 배상
	형사 책임	업무상과실이나 폭행 등에 대한 형사처벌	학부모의 고소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연퇴직
	행정 책임	성실의무위반,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	교육감 직권	

Ⅲ. 학부모의 폭행·폭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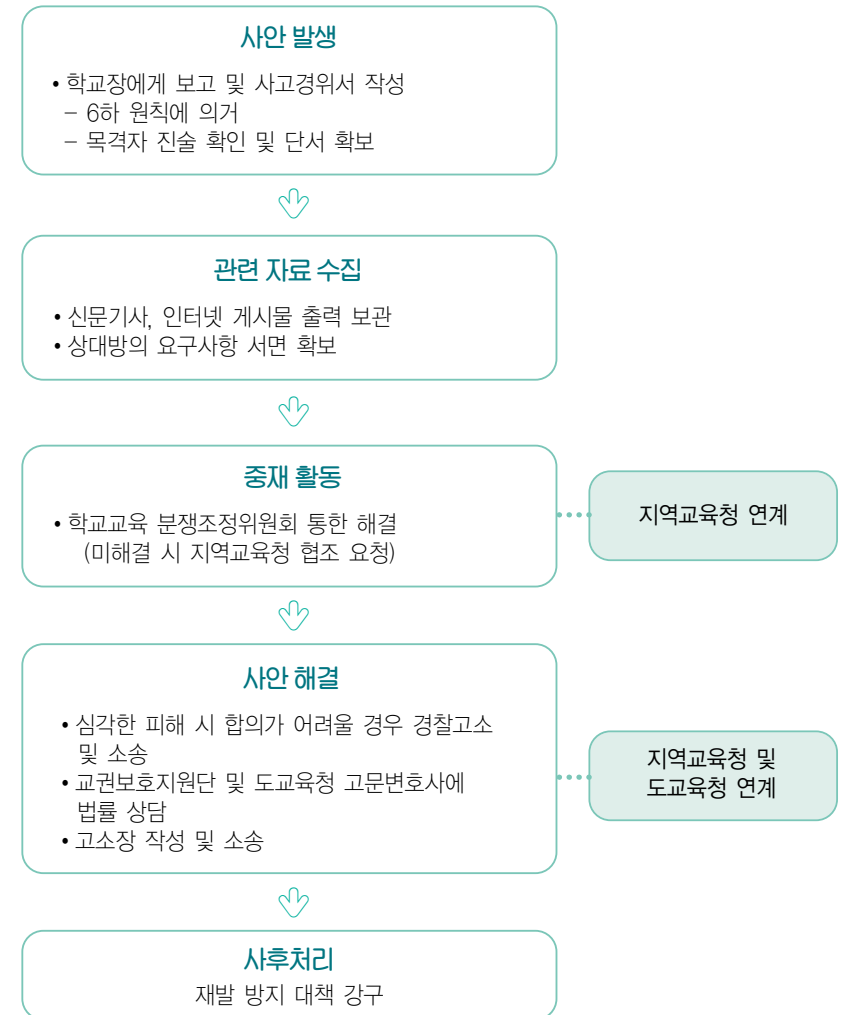
① 학부모 폭행·폭언으로 인한 교권 침해 현황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교사의 교육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요즘의 교육현장에서는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으로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그 정도는 폭행과 폭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② 학부모 폭행·폭언 관련 교원 유의사항

- 사전행위단계(폭언, 모욕)부터 상대방을 진정시키면서 이성을 잃지 않고 냉정한 자세로 차분히 대처한다.
- 사전행위단계에서 확대 예방 차원으로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경찰 신고 등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
- 폭행사건 발생 즉시, 교육청에 알려서 고소, 고발 등 사법절차를 포함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협의한다.

③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



④ 학부모의 교권침해 시 대응 요령

세밀한 자료 수집 및 확보

- 명예훼손(인터넷, 신문 보도 등)을 당하게 되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출력, 스크랩 등을 통해 증거물 및 증인 확보

민원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차분하게 설명하고 당당하게 임함

- 지역교육청 등 상급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집단성(개별성)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소극적 대응은 사건해결을 어렵게 하고 학부모가 악용할 소지가 있음
- 민원내용의 적절성, 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세심히 살피고, 교육자로서 품위와 당당한 자세 견지

사건 경위서는 일지형식으로 자세히 기록·보관

폭행으로 인한 교권침해의 경우 반드시 진단서 등의 자료 확보

⑤ 법원 판례

2008년 7월 3일 기말고사 시간에 3학년 ○○담임교사가 평가관리 중 ○○학생이 평가태도가 바르지 못함을 훈계한 사건을 두고 학부모가 여러 기관에 진정한 사건 발생, 이후 서로 화해함. 9월 개학 후 10월 중순까지 수차 ○○학생이 수업시간에 불참 또는 늦게 들어와 담임이 지도를 하였지만, 학부모는 학생을 방치하였다고 주장함.

10월 16일 학부모가 교장실을 방문하여 학교장에게 담임 교체를 요구함. 이 문제로 담임과 면담 중 학부모가 학교장이 보는 앞에서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교장실의 집기를 던지며 폭행을 가함.

담임교사는 교권침해(폭행 폭언)로 경찰에 고소하여 2009년 2월 18일 학부모는 공무집행 방해 및 공공기물 파손 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음.

2007년 6월 8일 영어교사(여)가 수업불량인 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훈계하던 중, 교무부장이 학생의 태도를 보고 '나 좀 만나고 가라' 하였으나, 그 학생이 교무실을 나가버리자, 교무부장이 따라 나가면서 교무실 앞 복도에서 그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무릎을 가지고 학생의 정강이를 툭툭 치면서 "너 요즘 왜 그러느냐?" 식의 지도를 하였음 → 1시간 후에 학생의 부모가 교무실에 들어와 교무부장(54세, 교직 경력 28년)의 뺨 등을 폭행하였음 → 교무부장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음 → 경찰에 맞고소 → 교무부장 300,000원, 학부모 1,000,000원 벌금형을 선고 받음.

A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 B학생의 아버지가 교실 앞 문으로 들어와 A교사를 향해 ‘우리 아이를 왜 왕따시키느냐’ 는 등의 폭언과 함께 옆구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플라스틱 우유박스를 집어던지는 등의 폭행을 함.

경찰에서는 B학생의 아버지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B학생의 아버지는 징역 1년(집행유예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음.

⑥ 학부모의 폭행·폭언 관련 Q & A

Q. 학부모가 학생의 잘못을 파악하지 못하고 교사에게 항의하는 경우도 교권침해에 해당하나요?

A. 「교육기본법」 제13조제2항에는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학부모는 학생에 대한 학교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학교의 태도에 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의 과오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의의 제기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그 자체만으로 교권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항의하는 과정 중에 교사 및 학교에 대한 모욕적 행동 및 폭력적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하여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

Q. 교사가 학생 상담 중 학부모가 교실에 들어와 자기 자녀를 차별했다고 폭언을 하며 책상 위의 서류 등을 던지고 집기를 부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와 적용 법률은?

A. 수업, 학사관련 사무 등 정당한 직무를 수행중인 교사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며 공무집행방해죄(「형법」제136조), 업무방해죄(「형법」제314조)의 적용을 받는다. 「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교 내에서 사용하는 공용기물, 서류 등을 손상, 파괴하는 등의 경우)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홍기나 철제외자 등의 물건으로 난동을 부린 경우)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사의 개인 사물 파손 시 해당)

IV. 학생의 폭행·폭언 관련

① 학생 폭행·폭언으로 인한 교권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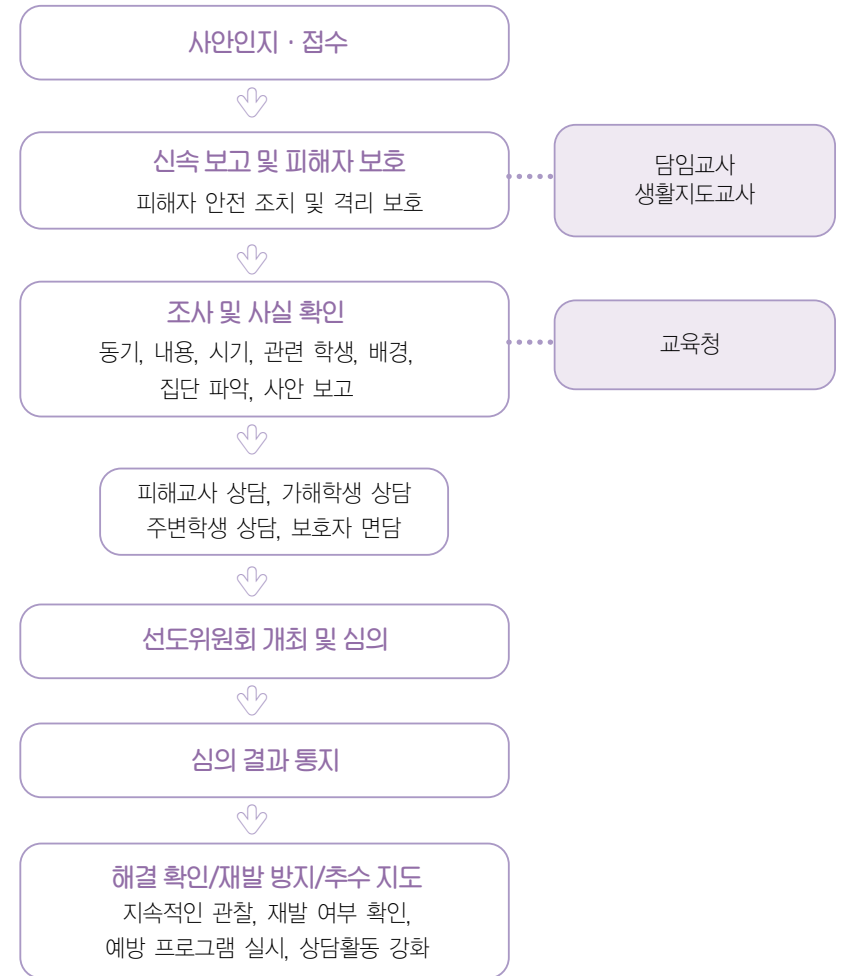
최근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불응 행위, 교원 대상 고소·고발 및 반항 행위, 면학분위기 저해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행위 등 학생의 폭행·폭언으로 인한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② 학생 폭행·폭언 관련 교원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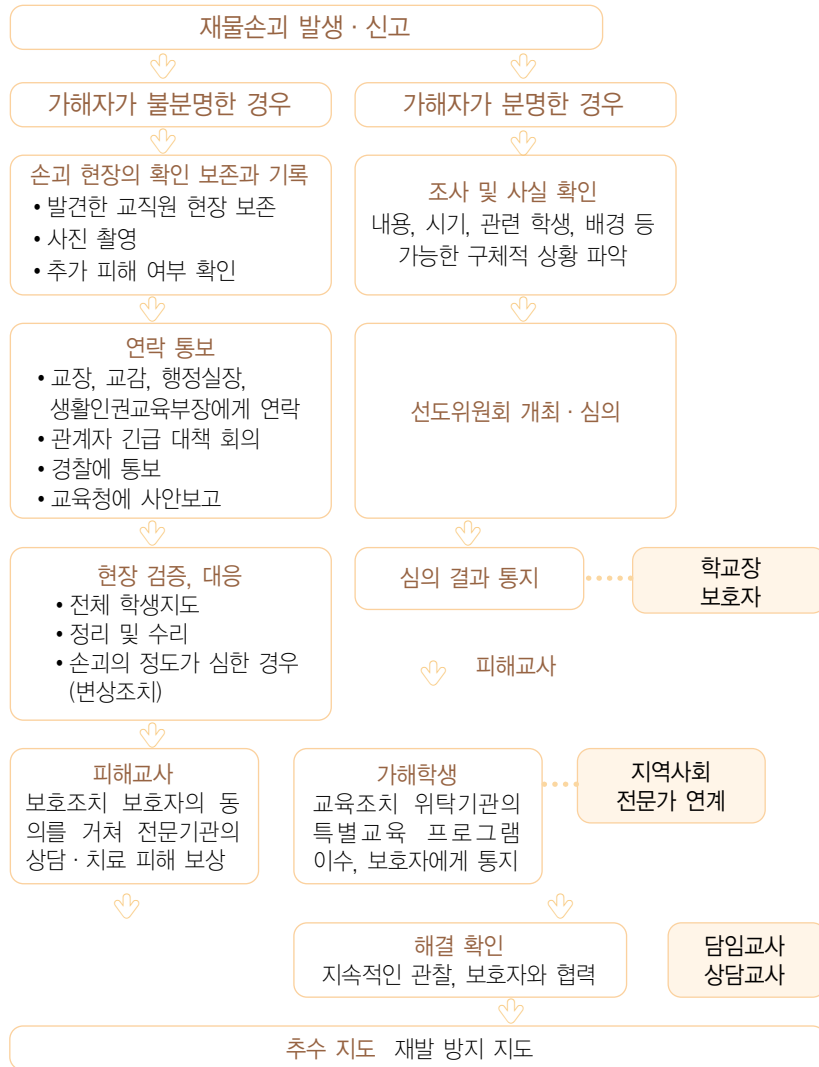
- 학생지도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행하기
-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적 폭력도 금지하기
- 학생상담 및 지도 시 가급적 학생과 동성인 교사가 담당하기
- 대체별은 독후감이나 반성문 작성, 봉사활동 등을 활용하기
-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나친 학생 신체접촉 지양하기
- 훈계·훈육의 목적과 불가피성 등을 학생에게 이해시켜 공감대 형성하기
- 학교의 학생생활인권규정에 따라 지도하기

③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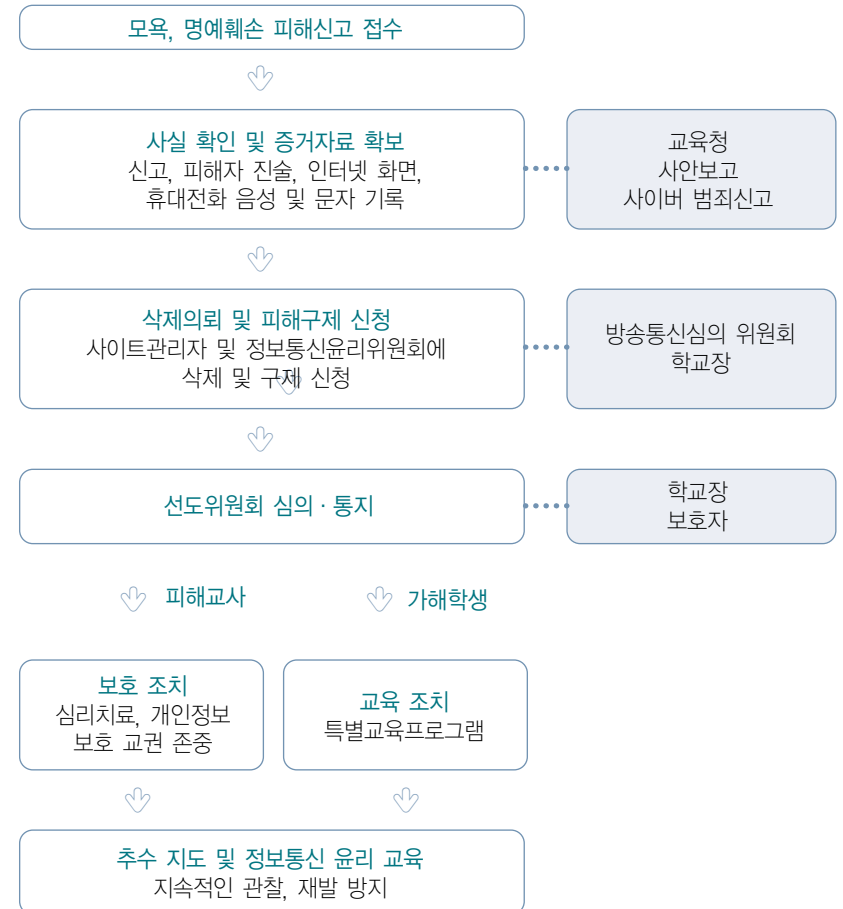
· 폭행



• 재물손괴



• 사이버 언어폭력



• 지도 불응



④ 학생 폭행·폭언 관련 교권침해 대응 요령

- 1 학생 및 학부모 반발 시 교무회의 및 선도위원회 개최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
- 2 미해결 시 상급기관 지원 요청 및 심각한 피해 발생의 경우 보상 요구
- 3 폭행으로 인한 교권 침해의 경우 반드시 진단서 등 증거자료 확보, 경찰에 고소
- 4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교권보호지원단 및 교원단체 등을 통해 변호사 선임 후 적극 대응



5 사례

울산 모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1학년 A군이 담임교사에게 압수당한 휴대폰을 되찾으러 갔다가, 이를 나무라던 정 모 교사를 폭행해 얼굴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 담임교사는 출근하지 못하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학교 측은 A 군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파주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흡연과 방뇨를 하던 학생들을 훈계하던 교사가 한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교내를 둘러보던 교사는 이동수업을 위해 교실을 옮겨야 할 학생 4명이 학교 건물 뒷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고, 한 학생은 건물 출입구에 소변을 보는 것을 보고 바로 학생들을 불러 세운 뒤 훈계를 했다.

하지만, 훈계를 듣던 학생이 갑자기 반말투로 “그만하고 법대로 하라”며 다가와 교사의 가슴을 손으로 가격했고, 이 같은 사실이 학생들의 입을 타고 인근 지역으로 퍼지자 학교 측은 지난 13일 교사 7명으로 구성된 ‘선도위원회’를 열어 이군을 ‘등교 정지’ 처분하고 이군의 부모에게 전학을 권고했다.

고성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수업 도중 소란을 피운 학생에게 주의를 주자 여교사에게 욕설하고 밀어 넘어뜨렸다.

학교에서는 퇴학 처분을 내렸지만 학부모는 오히려 퇴학 징계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6 학생의 폭행·폭언 관련 Q&A

Q.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 폭행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기록하여 선도위원회 개최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하고, 심각한 피해 발생의 경우 상급기관에 지원 요청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진단서 등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할 수 있다.

Q. 교사의 행동을 허락 없이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 협박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이버 폭력은 형법상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기록한다. 해당되는 범죄가 있다면 형사고소 할 수 있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Q. 수업을 고의로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속적인 지도 불응으로 인해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지역교육청 Wee 센터의 각종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다.

Q. 학생이 지도(징계)에 불응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비행 등으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지역교육청 Wee 센터 및 각종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원인을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폭행·재물손괴 등 비행정도가 심하고 징계, 상담 등 지도에도 불응할 때에는 학교장 통고제도를 통해 소년보호재판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V. 교원 및 행정기관 관련

① 교원 및 행정 기관에 의한 교권 침해

한국교총(2008년) 자료에 의하면 교직원간 갈등에 의한 교권 침해는 전체 교권침해의 1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직원 간 갈등 원인은 크게 학교경영간섭, 학교 구성원 간 사적인 갈등, 학교운영, 그리고 학생생활지도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경영간섭과 관련해서는 학업성취도 평가관련, 방과후 활동 관련, 업무분장, 교원들의 학교경영 간섭 등이 주를 이루었다. 그 다음으로 사생활과 관련해서는 교직원간 말다툼이나 폭언, 인격적인 모욕 등 관리자와 교사간의 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신분피해로 인한 교권침해 피해사례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둘째, 권고사직이나 직권면직, 부당한 전보, 주의·경고 등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② 교원 및 행정기관 관련 교원 유의 사항

-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탈피, 비판적 사고 수용
- 교육과정운영 문제 제기 시 집단적 이익보다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
- 관리자의 권위주의적인 자세 배제 및 민주적 리더십 발휘
- 대화와 타협 시 일방적인 자기주장 강요 배제
-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교의 정상적 교육활동 유지에 최우선을 둬
- 징계 사유 등과 관련된 법령을 숙지하고 대처
- 부당한 인사처리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기
- 금품 및 향응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체 주지도 받지도 않기
- 학생 성적은 공정·투명하게 처리하기

③ 교원 및 행정기관 교권침해 시 대응요령

- 교원 간 교권침해 발생 시 즉시 상담요청
(동료 교사 및 관리자, 교육청 담당자)
-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 확보 및 준비

- 해결이 어렵고 외부에 드러내기 어려운 경우, 비밀이 보장되는 교육청 홈페이지나 감사담당관 내부고발 사이트 활용
- 상담을 통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도교육청에 설치된 경기도교육정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 요구
- 고충심사 의결내용이 미흡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 요구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의결 내용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
- 계속 근무가 어려울 경우 교육청에 긴급 전보 요청

Tip! 이것만은 꼭!

- 동료교사 등 사건내용에 대하여 아는 사람으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고 관련 증거들을 수집한다.
 - 동료교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자필 확인서를 받아둔다.
 - 동료교사, 학부모의 진정서 또는 탄원서를 받을 수 있으면 미리 받아둔다.
 - 징계사유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업무일지, 출장일지·출석부 사본 등)가 있으면 미리 준비한다.
-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 의결 요구서 교부 요구(내용증명 활용)
-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여도 1회 교부한 것이 되므로 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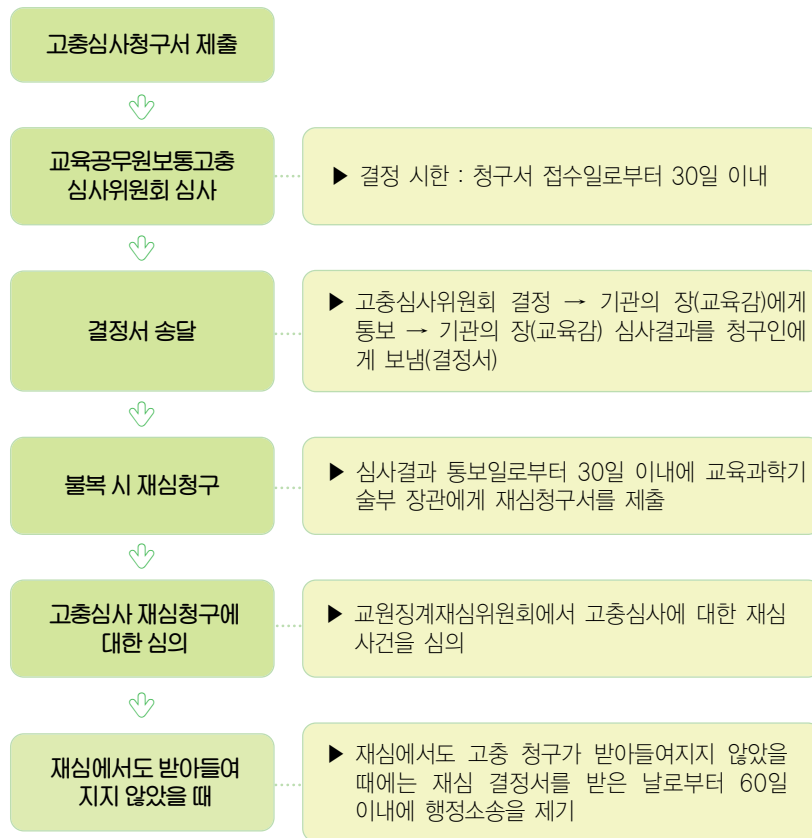
④ 사안 발생 처리 절차

· 징계처분 · 신분피해 구제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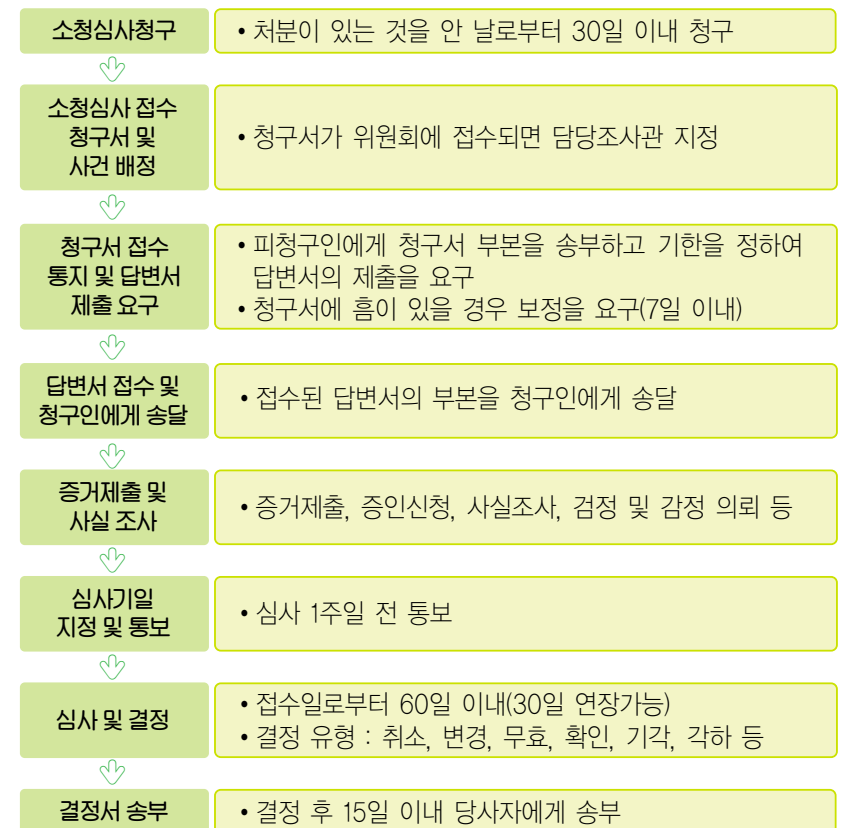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처리 절차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교원 소청심사 사건 처리 절차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부당한 인사 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⑤ 사례

□ 직원 여행을 가서 동료 여교사가 취중에 의견 대립이 있자 뺨을 때린 사례(2011)

- **사건 처리 과정** : 학교장과 부장교사가 모인 자리에서 가해 교사에게 사과하도록 하였으나 사과를 거부하자 과학부장 이 00교사가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함.
- **사건 처리 결과** : 학교장은 2010년 9월 1일자로 행정내신, 가해교원은 감봉 1개월 후 2011년 3월 1일자 행정 내신으로 관내 타 학교로 전출 감. 피해교원은 입원치료 후 2010년 2학기부터 정상 근무함.

□ △△초 O교사에 대한 신분문제 사례(2005)

- **사건 내용** : 2005년 5월 O교사는 임신 육아휴직 중 출산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조기복직을 한 후 출산휴가를 허가받음. 학교 측은 O교사가 육아휴직기간동안 같은 재단 유치원교사를 후임 발령하여 실질적으로 O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재단 측에서는 별다른 구제책을 제시하지 못함.
- **사건에 대한 법적 검토 내용** : 출산휴가기간 중의 결원은 기간제교사로 보충해야 함에도 정규 교원을 후임발령 조치하여 과원을 초래하였으므로 잘못된 행정행위임.
- **사건 처리 결과** : 해당교사 신분피해 없이 종결됨. 유치원교사는 3년간 공립파견을 조건으로 인사발령.

⑥ 고충처리 및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사례

△△고 ○○○교사의 정직 2월 취소 처분 소송(소청-2008-110)

- **사건 개요** : 청구인은 1991년 3월 15일 피청구인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8년 3월 2일 ○○부장의 보직이 해임되었음에도 이에 불복하여 ○○부장의 직무책상을 후임자에게 비워주지 아니하고 업무인계도 거절하여 학사업무에 지장을 주었고, 수차례 교내·외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하여 학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정직 2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직무책상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시위를 주도했다기보다는 민주적으로 학교가 바로 세워지기를 열망하는 다수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08년 4월 8일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다.

- **결정 요지** : 징계사유 중 일부는 사실로 인정되나,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사항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감봉2월로 변경 결정함.

△△중 ○○○교사의 정직 2월 취소 처분 소송(소청-2009-91)

- **사건 개요** : 청구인은 ○○중학교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08년 8월 28일 학교 교무실에서 자신을 모함한다는 이유로 교감에게

항의하면서 폭언을 하였고, 학교 앞 식당에서 교감의 먹살을 잡는 행동 등을 하였다는 사유로 2009년 2월 25일 정직 2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의 절차상 하자, 과중한 징계, 형평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주장 등을 하며 2009년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 결정 요지 : 절차하자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고, 징계사유는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나, 개전의 정이 보이고 피청구인도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감봉3월로 변경 결정함

△△중 ○○○교사의 견책처분 취소청구 (소청-2005-121)

- 사건 개요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유지·경영하는 ○○중학교 영어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학생건강기록부를 담당교사에게 지체 없이 돌려주지 않아 교사간의 싸움 원인을 제공한 것과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피해자로서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년 7월 13일 이의 취소를 구하여 명예회복을 하고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다.

- 결정 요지 : 폭행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징계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여 취소함

△△초 ○○○교사의 학교 재배치 요구 (교충: 2009-2)

- 청구 요지 : 청구인은 2004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09년 3월 1일자 정기전보 결과 ○○초등학교로 전보발령 되었는데, 청구인은 관내 전보 2순위인 청구인이 후순위 교사들보다 객관적으로 안 좋은 학교에 배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2009년 6월 9일 ○○교육청에 보통고충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교육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2009년 3월 1일자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전보는 '2009년 ○○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원칙'에 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불인용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합당한 기준에 의한 학교 재배치를 요구하면서 2009년 7월 17일 고충심사청구를 하였다.

- 결정 요지 : 관내 모든 학교에 적정수의 교원을 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가산점은 피청구인 인사관리세부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전보 순위에 반영되어 있으며,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미미하여 청구를 불인용.

△△초 ○○○교사의 경고 및 전출 취소 고충청구 (고충: 2009-3)

- **청구 요지** : 청구인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2009년 3월 18일 ○○교육청의 경고처분 및 2009년 4월 6일자 ○○교육청의 인사발령 통지에 대하여 ○○교육청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9년 6월 23일 불인용 결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년 1월 29일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내용의 비공개, ○○교육청의 경고처분 및 ○○교육청의 강압에 의한 전출은 부당하다며 2009년 7월 22일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 **결정 요지** : 민원내용의 비공개는 정보공개 관련법령에 의한 정당한 업무처리이자 이 건의 경고 조치와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각하하고, 경고 조치는 청구인이 소속 학교장에 대하여 교장 자격이 없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청구인도 시인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동의를 거쳐 전출시킨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를 불인용

△△중 ○○○교사의 전보인사시정요구 요구(고충-2008-2)

- **청구 요지** : 청구인은 ○○중학교 과학교사로 근무하던 중 2008년 3월 1일 정기 인사에서 관내 ○○중학교로 전보되기를 희망하였

으나, 전보되지 않아 2008년 2월 27일 ○○교육청에 보통고충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학교교육과정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전공을 표시하여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발령한 ○○교육청 교육장의 인사행위는 2인 이상의 과학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는 같은 전공의 교사가 중복 배치되어 교육과정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당하다고하면서 청구인의 청구를 불인용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교육청의 '2008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지침(중등)'에 '전보 순위는과목별, 희망지별로 전보점의 순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중학교 과학과목은 고등학교와 달리 통합교과이며, ○○교육청 16개 공립중학교 중 2인 이상의 과학교사가 배치되는 경우는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2008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고충심사 청구를 하였다

- **결정 요지** : 대부분 중학교 과학교사가 1인이고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와 달리 '과학'이라는 하나의 교과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장이 요청한 전공에 따라 인정한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할 것이어서 향후 중학교 과학교사 전보인사시 전공별이 아닌 과목별로 이루어지도록 피청구인에게 권고함.

7 교원 및 행정기관 관련 Q&A

Q.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구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학교에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크게 나누면 고충심사청구, 소청심사청구, 부당노동행위구제청구 그리고 성희롱이나 성차별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원회 진정 등이 있다.

Q. 보건의유가를 받았을 경우 대체강사를 채용할 수 없나요?

A. 학교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강사를 채용하여 수업을 할 수 있다.

Q. 수업 중 축구부 코치가 아동을 불러 심부름을 시키려 하자, 수업 중에 학생을 함부로 데려갈 수 없다고 했으나 막무가내로 욕을 하고 먹살을 잡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교육활동 중에 교실에 무단 난입하여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먹살을 잡는 등의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참고문헌 |

-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방안 및 교권보호헌장 제정 연구. 2010
-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헌장. 2010
-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를 위한 교권침해 대처방안. 2010
- 강인수. 교육법 연구. 문음사. 1989.
- 고전·박경묵. 교사의 권리와 의무. 고재천 외. 초등학교 교사론. 학지사. 2007.
- 교원단체총연합회. 2008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 실적. 2009.
- 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침해예방 및 교권보호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2006.
- 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보호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8.
- 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2006.
- 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침해 이렇게 대응합니다. 2006.
- 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의 교육권 보호에 관한 제도 발전 방안. 2007.
- 교원단체총연합회.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6.
- 남기송. 학생 및 교원의 교육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7.
- 대한교육연합회.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대한교육연합회. 1982.
- 박종배. 중국교육법치화 시대의 교권.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 2004.
- 한국교육정책연구소. 교직사회 갈등해소 방안 연구. 2004.
- 허종렬 외. 주요국의 학교분쟁 해결제도 비교연구. 교원단체총연합회. 2002.
- 전국교직원연합회. 교권상담 자료집 '따르릉'. 2010.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교권보호 길라잡이

이럴땐 어떻게?

지도위원 이관주/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이현숙/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혁신과 과장
문병선/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혁신과 장학관
황중원/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혁신과 장학관

자문위원 강명숙/ 배재대학교 교수
권혁수/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혁신과 장학관
강윤석/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장학관
박응순/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 법무담당
변철수/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기획위원 한정숙/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혁신과 장학사
양은숙/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혁신과 장학사

집필위원 장덕진/ 수원 천일초등학교 교장
박성훈/ 군포 광정초등학교 교장
오정호/ 성남 늘푸른고등학교 교감
김정아/ 화성 안화중학교 교사
남기홍/ 안산 성포고등학교 교사
서지연/ 성남 영성여자중학교 교사
신중찬/ 평택 안일초등학교 교사
이철규/ 수원 천일초등학교 교사
지선아/ 평택 효덕초등학교 교사

발행일 : 2011년 8월

발행인 : 경기도교육감 김 상 곤

발행처 : 경기도교육청(www.goe.go.kr)

제작처 : (주)현문 / 031-901-1424, 02-790-1424(출력실)
www.hyunmum.com